비 전 2030

〓 차 례 〓

1.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2. 사회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
3. 동반성장의 중심에 비전 2030이 있습니다
4. 미래로 가는 핵심전략 비전 2030

1.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당에서 고민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당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 오찬에서 2004. 8. 30)

이제 대한민국도 법과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시장은 매우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도록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진보의 속도는 세계 최고일 겁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져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아직은 미흡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동포 간담회에서 2004. 12. 6)

□ 복지는 사회통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성별, 세대별, 또는 장애유무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다 묶어서 차별시정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농업과 노동이 또 하나의 큰 사회적 분열과 갈등 요소입니다. 세상이 아주 빨리 변하다 보니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간의 격차가 커집니다.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기술적인 것을 비롯해 동북아 시대, 지방화 시대 등 발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사회통합, 국민 간의 일체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발전전략도 중요하나 발전은 정부가 안 나서도 민간에서 비교적 잘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회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통합전략이 성공해야만 발전이 복지 국민의 삶으로 이바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정과제회의(T/F)에서 2003. 5. 9)

□ 책임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

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 합니다.

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해 왔습니다. 1997년에 비해 사회보장 예산은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 명 정도 더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그리고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6. 1. 18)

2. 사회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

□ 사회투자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인적자원을 다시 되살려내는 작업이 복지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측면에서의 복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배, 선분배 하려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것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생각하고 복지투자를 사회투자라는 이름으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투자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의 역할이 나옵니다. 작은 정부가 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돈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쓴다는 뜻에서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하지만,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투

자는 20, 30년 뒤에 본전이 나오는 것인데, 어느 기업이 그걸 내다보고, 교육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평생 교육 보장하는 것도 개별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재교육을 하지만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접근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할 일입니다.

대개 선진국은 평생교육의 접근율이 50%가 넘는데 우리는 아직 20~21% 수준입니다.

질도 아주 낮습니다. 이걸 다 끌어올려야 비로소 한국도 책임을 다하는 국가가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유럽과 비교해 보면 인적자원을 재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유럽의 10분의 1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니 동포 간담회에서 2006. 12. 7)

□ 사회지출·복지지출, 지속가능한 경제 위한 투자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성장과 복지를 별개의 가치로 전제하고, 참여정부의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분배정책, 좌파정책이라 이름 붙이고 끊임없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둘로 나누는 사고는 낡은 생각입니다.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만을 대변하는 주장입니다.

사회지출과 복지지출은 더 이상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보입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없고 끼니를 걱정하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 안정된 직장이 없고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의 기회도 없는 사람들이 넘치는 나라의 경제가 경쟁력 있는 경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이치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 민주주의 궁극적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 잡힌 사회

그러나 아직 크게 뒤처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투자와 균형발전입니다. 복지 예산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참여정부 들

어서는 복지 예산을 정부 예산의 20%에서 28%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투자는 북유럽의 1/3, 미국·일본의 1/2을 넘지 못하고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복지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30'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균형이 잡힌 사회, 이것이 진보의 본뜻입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울러 복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복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단순한 소모적 지출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질병과 노후, 주거에 대한 불안이 없고, 자라나는 아이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라야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2007. 4. 30)

□ 사회투자국가 측면에서 본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친화적인 사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요새 말하는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책만 읽고 또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만들면 좀 아무래도 우리한테 안 맞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저도 정책을 하면서 보고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정책 당사자들, 정책 수요자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계속 토론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토론해 가면서 정책을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사회투자국가론이라는 것을 골간으로 또 우리 정세에 맞도록 설명한 것이 지금까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혁신벤처기업인 특별강연에서 2007. 10. 19)

□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구조를 갖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복지지출 증가가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복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성숙정도나 국민의 요구수준 등을 볼 때, 교육, 주거, 노후,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혁신과 인재육성의 전략적 접근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기술인력 혁신보고회에서 2006. 11. 6)

3. 동반성장의 중심에 비전 2030이 있습니다

□ 비전 2030은 장기 재정계획

국민의 정부 시절에 중기 재정계획 제도가 만들어졌고 참여정부부터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중기 재정계획을 시행해 오면서 이제 우리도 장기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비전 2030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2030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가을에 큰 골격이 형성됐습니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내용을 다듬고 토론을 해 왔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발표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준비와 대응에 있어서보다 관심을 갖고 또 내용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2006. 8. 30)

□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 삶의 질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비전 2030은 이

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국가전략입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사회·경제 분야의 제도혁신이 2010년까지 마무리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토대로 202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의 삶의 질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2006. 11. 6)

우리는 지금 선진한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함께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양극화 해소는 물론이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정부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마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전 2030은 미래의 도전요인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가기 위한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삶을 누리는 세계 일류국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미 이웃사랑과 시민의식 고취에서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한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006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 축하 메시지에서 2006. 11. 24)

□ 2만 달러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 2030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지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사회응집력 등 걸림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비전 2030은 국가발전전략의 종합판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한국의 필수과제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저출산, 국민연금 등 필요한 개혁을 제때 해야 합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민생문제의 해결 대안은 비전 2030

민생문제를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민생파탄을 외치면서 자기들이 집권만 하면 금방이라도 민생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국정실패로 몰아붙이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문제라는 것이 한두 개의 정책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정부의 정책이 쌓여서 오늘의 민생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양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이고 미국도 일본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전반, 일자리,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비정규직, 교육, 부동산, 이런 모든 정책이 성공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으로 엮어서 국민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도 없이 비방만 하고 정책도 없이 큰소리만 하는 풍토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대안을 말하고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는 책임 있는 사회풍토가 만들어져야 진정한 민생대책이 채택되고 실천될 수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비전 2030은 사회투자전략

정책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름이 작은 것 같아서 사회투자전략으로 바꿉니다. 비전 2030의 전략적 목표는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와 능동적 세계화, 사회복지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의 다섯 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게 교육 받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널려진 기회를 향해서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오늘과 미래의 불안이 적은 나라, 환경이 쾌적하고 문화가 좀더 활짝 꽃피면 더 좋겠지

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 경쟁력 있는 국민이라야 궁극적으로 한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고 드린 이 모든 정책이 이제는 혁신주도형 경제의 시대에 있어서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투자전략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 멀어

한국의 사회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문민정부 3.2%, 국민의 정부 5.6%에서 2005년에는 8.6%로 늘어났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한심한 수준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의 2분의 1, 북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고용지원 예산은 북구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OECD 평균 수준까지는 가자는 것이 비전 2030의 계획입니다.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에서 2007. 3. 13)

4. 미래로 가는 핵심전략 비전 2030

□ 2만 달러 시대에서 3만 달러로 가자면 새로운 전략 필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과 비전 2030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들어갑니다. 19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만의 일이고, 외환위기를 겪고 다시 1만 달러에 진입한 지 7년만입니다.

좀 깎아서 말하면 원화 가치 덕분입니다. 다만 저는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수출이 늘어나서 외환보유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다 보니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2만 달러 달성은 단지 환율 덕분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 미국은 10년, 독일은 13년 걸렸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서 2만 달러에 들어선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3만 달러 시대로 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3만 달러 사회로 가려면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한국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전 2030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복지미달, 낮은 수준의 법질서·사회응집력 등 걸림돌 해결해야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이전과 다르고 경쟁자가 이전과 다릅니다.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불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소득 2만 달러가 되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선진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정이 선진국의 평균에 현저히 미달하고, 법질서 준수, 사회응집력 등의 사회적 자본의 지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IMD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우리의 사회응집력은 세계 48위입니다.

강력한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행, 남북의 대결상황,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등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 세워야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동반성장, 균형발전,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평화의 동북아 등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기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전략으로 다시 말하는 이유는 말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내부 거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에 대한 재계의 저항이 있고, 선생님, 노동자, 농민, 일부 중소기업들의 개방과 경쟁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비전 2030은 국가발전전략의 종합판

세계일류국가, 선진한국의 비전과 국가발전전략을 종합하여 전략적 체계로 재구성한 것이 비전 2030입니다.

이름은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입니다.

비전은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에 GDP는 4만 9,000 달러로, 국가경쟁력은 29위에서 10위로,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공공사회 지출 8.6%에서 21%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전략적 방향의 특징은 사회투자와 사회적 자본입니다. 전략의 핵심적 수단은 제도 혁신과 선제 투자입니다. 그 안에 50개의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와 숫자는 융통성 있게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선진한국 필수과제

25년을 내다보고 만든 장기 계획입니다. 과제만 늘어놓은 종이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계획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 없는 선진한국의 필수과제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과 언론은 세금 더 내라는 이야기냐고 시비만 하고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감세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필요한 돈은 예산의 절약과 구조조정, 투명성 확대를 통한 세원의 확보, 불합리한 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회피하고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지도자는 경제만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성장과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신년연설에서 2007. 1. 23)

□ 비전 2030같은 국가 장기 재정계획은 이번이 처음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혁신주도형 경제정책이라든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미래성장동력, FTA,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이 모두가 미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미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부혁신과 균형발전,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미래 과제를 모아서 종합적인 체계로 정리한 것이 다음에 말씀드릴 2만 달러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그리고 비전 2030입니다.

그 전에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이런 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가 재정계획으로서 장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이라고 자랑할 일은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해야 할 일을 빠뜨리지 않고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심포지엄 특강에서 2007. 1. 31)

□ 2030 사회투자전략은 우리 사회'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는 전략'

2030 사회투자전략, 2030년 미래전략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돈 좀 더 거둬서 누구에게 좀더 나눠 주는 이와 같은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제도가 있다면 빠르게 고치고, 기왕에 할 투자라면 좀 더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전략을 통해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50개 과제 중 24개가 제도 혁신 과제이고, 26개가 선제적 투자 과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부당한 조세 감면의 축소라든지, 철저한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또는 조세 투명성 확보를 통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등의 방법으로 일단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메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부도 약간의 국가 채무를 더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특별히 국민 부담을 더 요구하지 않고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정권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알면 대통령이 욕심이 너무 많다고 할 것 같아서 모르기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떻든 지금부터 앞으로도 10년 이상 계속해서 이 문제에 매달려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의제로 삼아야 하고 국민적으로 토론을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신년인사회에서 2007. 1. 3)